

광주 민간공항, 내년에 무안으로 갈까

이용성 시장 “시민 의견·전남도와 협력관계 등 고려해 결정할 것” 시민권익위, 공청회·여론조사 후 정책 권고...광주시 결단 관심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하기로 합의한 시한이 다가오면서 광주시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측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민간 공항 전남 이전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광주시민들 사이에선 민간공항 단독 이전은 안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성 광주시장은 26일 광주시청 출입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 공항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두 공항을 합쳐 무안공항을 국제공항다운 공항으로 만들어 사·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다만 통합 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상생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광주시민 의견, 전남도와 협력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안군은 2018년 8월 한자리에 모여 2021년까지 광주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통합하기로 협약한 상태. 당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3자 협약에는 광주공항 무안 이전만 거론됐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별도 상생 협정문에는 민간공항 이전과 함께 군 공항 이전

도 전남도가 협력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2개의 협약 내용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자 해석을 달리하며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국토부 종합계획, 2018년 합의 등을 근거로 내년까지 민간 공항을 합쳐대로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협력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공항만 넘겨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시장은 “민간공항 통합을 약속했을 때 대부분 시민이 ‘잘했다’고 했고, 그 바깥에는 군 공항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그러나 국방부에서 보낸 설명 자료 우편물을 전남 일부 시·군에서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

하는 상황에서 민간 공항만 이전하면 군 공항만 광주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냐는 생각을 시민들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정책을 권고하면 그 내용과 전남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할 때 입장을 밝히겠다”며 “그때까지 사·도민이 우려하는 분열, 갈등 등이 야기되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민 2천5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에 정책을 권고할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교수, 시의회, 공항소음대책위 관계자들과 공청회도 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수 묘도에 동북아 LNG 허브 조만간 착공 한양, 2024년까지 1조2000억 투입 저장탱크 4기 등 건설

여수 묘도에 동북아 LNG(액화천연가스) 허브 터미널을 건설하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됐다. 26일 전남도, (주)한양 등에 따르면 한양이 지난 23일 여수시로부터 동북아 LNG(액화천연가스) 허브 터미널 건설을 위한 공작물 축조신고 승인을 받아 조만간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양이 여수시 묘도 65만㎡ 규모 부지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20만㎥급 LNG 저장탱크 4기와 기화송출설비, 최대 12만7000t 규모의 부두시설을 준공하는 사업이다. 한양은 앞서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만㎥급 LNG 저장탱크 1기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연내 추가 수요처를 확보해 LNG 저장탱크 총 3기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을

추가, 당초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던 총 4기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을 모두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한양은 이번 착공을 기점으로 연내 인허가 승인 후 2021년 중순까지 기초공사를 하고, LNG 저장탱크 및 기화송출설비 등 본설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국내 발전용·산업용 수요처에 LNG를 공급하고, 글로벌 LNG 트레이더들에게 LNG를 저장·반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9월 말 한양은 천연가스 반출입 사업용 탱크 임대 위한 보세구역에 허가받아 반출입업 탱크 공사계획까지 앞두고 있어 해외 LNG 트레이딩이 가능한 개방형 민간 터미널의 면모를 갖춘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 1000개로 확대해야”

지역별 특성 반영 사업 추진을 민주 윤재갑 의원 국감서 주장

문재인정부에서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커지고 있다.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색과 실정에 맞게 개발하는 어촌뉴딜 300에 관한 참여 열기는 뜨거워지는데, 선정 규모는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은 2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어촌의 13.8%만 대상으로 시행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의 대상지를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이개호 위원장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는 국감에 앞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저히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전남은 다양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타 시도와 비교하면 시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역 안배보다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국의 300개 어촌·어항(국가 어항 제외) 시설을 현대화하고, 마을 특색 있게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별로 수심·수백역원

의 예산이 투입되고 전체 총사업비는 3조 13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업 대상지 어촌은 선착장·여객선대합실, 방파제 등 어촌 필수시설을 개선하고 마을이 품고 있는 역사와 문화, 산업 등 고유 자원을 살려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펼 수 있다. 그런데 전국에 걸친 2170개의 어촌·어항 가운데 단 300곳만 선정해 사업을 진행

하다 보니 전국 어촌에서 대상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촌마을이 늘면서 전남도는 사업 대상지를 기존 300개소에서 1000개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도 지난 7월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전남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2020특별기획전 ‘성료’

수목 대중화·국제화 기여

‘부릉부릉 수목시동’이란 주제로 열린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2020 특별기획전’이 지난 23일 폐막하며 3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뉴노멀 시대에 맞춘 온·오프라인 전시관 운영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장르와 경계를 초월한 수목 확장성을 통해 수목의 대중화·국제화·브랜드화를 모색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목포 원도심 근대역사의 자취가 어려웠던 세종소주방, 동아약국, 박석규 미술관, 빈집전, 목포역사알리미센터 등 건물 5개소를 초월한 수목 확장성을 통해 수목의 대중화·국제화·브랜드화를 모색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역상생을 위해 지역 청년

예술인과 국내 유명한 초상화가, 그래픽 디자이너, 미디어 작가, 건축가 등 40명이 참여한 수목의 장르와 재료적 한계를 초월한 그래픽 생활디자인 미디어, 영상, 회화, 벽화 등 수목정신이 반영된 80점의 다양한 작품이 선보였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수목 특별기획전은 지난달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4만1553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관람객 2만9572명, 오프라인 관람객은 1만1981명으로 집계됐다.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내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윤립산방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타이어휠 고의 훼손 재발 막는다

무등록 정비행위 지도 단속

광주시는 자치구, 정비조합과 함께 오는 11월부터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 및 타이어 판매점을 대상으로 무등록 정비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광주의 한 타이어판매점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휠 교체를 권유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도점검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정비업 1316곳과 모든타이어 판매점으로,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휠 얼라인먼트 장비를 사용해 자동차 바퀴를 정렬하는 정비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오일보충 및 교환 ▲에어크리너 및 필터류 교환 ▲배터리·전기배선·전구 교환 ▲냉각장치 점검 ▲판금·도장·용접이 수반되지 않은 차내설비 및 차체점검 등 간단한 정비만 타이어업체에서도 가능하지만, 타이어 휠 얼라인먼트 정비는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할 수 있다. 무등록사업자가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무등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